



가을 익어가는 제주

산허리를 하얗게 수놓은 메밀꽃이 장관이다. 가을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이 난다. 메밀꽃 무리 너머에는 바다와 제주시내 풍광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제주의 가을 자락을 만끽할 기회다. 사진은 제주시 오라동 메밀밭. / 김명선 주무관

## 주요 현안에 과감한 지적... 적극 대책 주문

10일부터 31일까지  
제421회 임시회 열려  
제주도·도교육청 상대  
2023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역 현안 및 예산 두고  
날카로운 지적 이어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0일부터 31일까지 제421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다.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집중 점검을 비롯해 행정 집행 실태,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는 행정체제개편 용역과 제주청년센터, 제주국제학교 매각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도마에 올렸다. 용역이 발표될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행정체제개편과 제주도와 사전협의 없는 제주국제학교 매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의 건축 재정 기초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거액을 들여 구입한 드론은 무용지물로 전락했으며 공용차량도 내구연한이 충분한데도 전기차 구입에 나서고 있는 행정을 향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

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형평성 논란 등을 해소하면서 제주지역 전 매장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는 관광산업 전반의 체계적 관리를 주문했다. 들불축제 개최 취소를 두고는 도민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며 속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제안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가공용 수매단가 재논의를 비롯해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국비 확보 노력을 촉구하는 등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또한 전기차 보급 목표가 실현 불가능 상황임을 인지, 재검토할 것을 요

구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위원들의 질문은 서부중 신설 사업과 제주형 자율학교 등으로 향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 오라청사에 대한 예산 낭비를 지적, 효율성을 높이도록 주문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김경학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방안,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형 복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선 과감한 지적과 대안 마련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422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제422회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 지면안내

- 2~3 주요 이슈
- 4~5 생생 의정활동
- 6~8 2023 행정사무감사
- 9 전반기 조례안
- 10-11 함께합시다
- 12 의회 사무처 소식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 제시해 나가겠다”

## 제421회 임시회 개회사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 할 수 있다”며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선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라며 “경기침체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거세지는 정책변화 속에서 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실리 증진의 노

## 2023 행정사무감사는 현안 해법 모색하는 일정

### 행정 체제 개편 용역 관련해 “도민 선호 행정 구역안 배제, 제외한 이유 설명해야 할 것

력은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학 의장은 같은 날 열린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행정구역 중간 보고회와 관련해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 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은 적합 대안에서 임

의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 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수와 소요 비용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사 위치와 청사 건축비, 구역 분할시 재정 여건 분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특히 “의회에서는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철저하게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의회도 도민들의 판단을 돕도록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관련해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높



이 평가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의 몫이 될 것이란 우려의 소리도 높은 만큼,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보다 다양한 아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경학 의장, 현장 소통 행보 강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발로 뛰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0일 청년주간을 맞아 김경학 의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청년사업사관학교 회의실에서 청년 CEO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청년 CEO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청년 CEO 5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청년 CEO들은 △청년창업 기업을 위한 도외 물류비 지원 △

### 청년CEO와 소통 이어 인구보건복지협회 도지회 임직원들과 간담회 개최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 눈길

소규모 정기적 취업박람회 개최 △도내 기업과 청년인재 매칭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해양레저사업 활성화 위한 제도 마련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도입 또는 전환 시 지원 △문화예술분야 예산 지속

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간담회가 청년 CEO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현실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제주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청년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김경학 의장은 현장 행보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로 향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산부들의 출산과 양육 지원책 및 저출산 문제 논

의를 위해 마련됐다.

김경학 의장은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자리했던 고신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장은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며 특히 가치관 형성에 있는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추진중이나 올해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며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제420회 임시회 폐회식 직후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고 APEC 제주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제주도의회, 추석맛이 전통시장 찾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9월 25일 의원 및 직원 120여명이 참여해 제주동문시장을 방문,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보탬을 더했다.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제주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에도 동참했다.

이날 의원 및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는 한편 시장 내에서 직접 제주 용품 구입에 나섰다.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을 이용하는 등 전통 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의원 및 사무처 직원  
제주동문시장 방문해  
수산물 업소 이용  
제주 용품 등 구입도

또한 제주동문시장의 4개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동향 및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에 대한 보완책 등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경학 의장은 “오늘 우리 도의회 의원 및 직원이 대거 참여해 지역 상권 내수진작과 도내 수산물 시장의 경기 회복에 미력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됐



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주지역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도민들께서도 제주

청정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하시고, 이와 더불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출생 해소...“정책 대상, 집중 지원 필요”

도의회·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제 세미나 공동 개최  
“재원 마련도 고민해야”

저출생 대응으로 관련 정책의 대상을 결혼 및 출산 의사가 있는 청년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책 재원으로 풍력 공유화와 카지노세의 복지 재원 활용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저출생 해소 방안을 위한 자치법제 세미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여진 선임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 현황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 나섰다. 정여진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도는 2030 인구 순유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책 대상의 측면에서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므로 저출생 대응 정책의 대상은 결혼 및 출산

의사가 있는 청년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수 기준이 아닌 부모 연령의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가입기간에 최대한 출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 지원 우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마련된 토론에서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을 좌장으로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영

기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화 대책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 및 사회·경제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유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제주의 대표적 자연 자원인 풍력을 공유화하는 방안과 카지노세를 복지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지방시대, 기회발전특구가 핵심”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지방시대 정책방향과 과제’ 정책 간담회 진행 눈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와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난 9월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전략국 하정석 전문관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강철남 위원장과 양용만 부위원장(국민의힘, 한림읍), 이정엽(국민의힘, 대륜동)·하성용(더불어민주당, 안덕면)·한권(더불어

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지역의 우선순위 계획들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상향식으로 반영되는 방안 필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강철남 위원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성공요인은 ‘상향식’ 정책 수립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핵심”이라며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사업인 기회발전특구 등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자치 및 분권모델 협력 구축

## 11월1일 제주도의회서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공동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개최

특별자치시·도 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가 11월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다.

제주·세종·강원·전북 시·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지방자치 및 분권’이다.

지난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이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한 데 이어 내년 전북이 예정됨에 따라 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자치 및 분권모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박람회에서는 지방분권시대 선도를 위한 특별자치시·도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협력 강화 토론회 및 4개 특

별자치시·도 특별법 권한 이양 및 활용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제안 등을 들을 수 있는 ‘생생소통’ 등 도내 대학생들이 참여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도민들이 생활에 꼭 알아야 할 조례’ 소개, ‘제주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지방분권 및 권한 이양 사례’, ‘도민사회에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안내 등 도민 사회에 지방의회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박람회는 4개 특별자치시·도 의회 협력의 첫 시도로, 동반성장을 협력 및 공유하기 위한 정기적인 행사 개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청정 생물 자원 기반 산업 육성 독려

##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및 화장품원료센터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지난 9월21일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와 화장품원료센터 현장 방문에 나섰다.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와 화장품원료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에 공모해, 2018년 ‘청정자원 기반 화장품 원료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과 2019년 ‘유용 아열대 미생물 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각각 선정

돼 지난해 11월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부지내에 문을 열었다.

이날 위원들은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와 화장품원료센터의 주요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원료와 제품연구·개발 및 생산 현황과 기업입주 현황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센터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았다.

강연호 위원장은 “제주 유용 생물 자원의 산업화 연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제주 청정 생물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을 더욱 고도화시켜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해양교육문화 사업 해녀문화에 편중”

##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해양문화연구 중간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갑)·하성용(더불어민주당, 안덕면)·강동우(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제주국제대학교산학협력단 홍종현 단장이 ‘제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초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홍종현 단장은 “제주도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추진사업이 대부분 해녀문화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해양레저 분야도 극히 제한적”이라며 “체험지원 및 자격증 취득은도가 아닌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재 및 미래 교육 계획에서 해양 또는 제주 바다를 키워드로 하는 종합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도내 학교에서 진행되는 해양교육체험은 전체의 약 2%만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제주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및 교육청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계획수립 의무화가 요구된다”면서 “제주도와 교육청을 통합한 (가칭)해양교육문화협의회 구성을 통해 해양교육센터 및 지구지정 등 지역 중심 특성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주 바다를 위한 해양교육문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천원의 아침밥’ 연장 운영 필요합니다”



## 청년이 행복한 제주 제주청년주간 맞아 제주한라대학교 방문 사업 관련 애로사항 청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제주한라대학교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 하며 현장 소통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이 행복한 제주’(대표의원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는 제주청년주간을 맞아 제주한라대 학생들과 함께 아침 식사 자리를 마련, 사업 현황 점검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경학 의장과 한동수 대표의원,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상봉(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한권(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견입동) 의원이 동행했다.

이들 의원들은 양경민 제주한라대 총대의원회 의장과 김가현 감사차장, 김은성 기획국원, 유지선 홍보국원, 이지민 운영차장 등 학생대표단과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이 현재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운영되는데, 영업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맛과 영양이 더해져 더욱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장은 “학생

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동수 대표의원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학생이 한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 지자체가 2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제주도가 지난 추경에서 관련 예산 1억원을 반영해 의회에 제출한 것을 제주도의회에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 예결위·재정경제포럼 예산 심사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 한림읍)와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지난달 2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산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2024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청, ‘지방재정 동향과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재정경제포럼 의원들은 지방재정 여건과 예산안 심사 전략을 청취하고 심사 방향을 모색하는 등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세 감소와 지방세수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도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의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호형 재정경제포럼 대표의원도 “세심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정의 재정 운용이 도민에게 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모, 산후조리서비스 이용 형평성 보장돼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과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지난달 2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산후조리원 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질 좋은 산후조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의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이 ‘공공산후조리원 도입배경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재희 연구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제주지역 산후조리원

## 도의회 김경미·김기환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서비스 강화 토론회 개최

은 총 7곳으로, 지난해 제주도 출생아 수가 3,599명인데 반해 산후조리원 수용력은 2,3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예상 입소 인원인 2,922명보다 부족했던 상황이다.

이재희 연구위원은 “서비스 이용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저출생 대응 정책인지, 민간산후조리원과의 경합관계는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지역 산모들이 질 좋은 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육아친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도 “제주에서 출산한 산모 모두 출산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와 산후조리비 지원 등 현실 체감형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행정체제개편·제주청년센터 도마 위

## 행정자치위원회

“용역 발표될 때마다  
잡음, 신뢰성 확보돼야”

제주청년센터 관리 부실,  
국제학교 매각 과정에  
도와 협의 없이 진행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가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용역과 제주청년센터 조직·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도마에 올렸다.

12일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발표될 때마다 잡음이 들리고 있다”며 “주민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 용역 신뢰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철남 위원장 역시 “제대로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행정체제 개편 관련 수립된 의견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조직관리 컨설팅 결과에 대해 “기관의 지역성에 대한 정서, 조직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평가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며 “관리감독기관인 4·3지원과와 재단의 문제점도 분명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16일 “올해 퇴사한 인원만도 6명이다. 3개월도 안돼 직원

의 40%가 바뀐 셈”이라며 “제주청년센터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 내부 직원 간 충돌과 갈등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가 지도·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양용만 의원은 “규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면서 “규제 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이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정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철남 위원장과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읍)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를 민간에 매각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와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동수 의원은 “매각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제주도도 문제다.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철남 위원장도 “제주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자칫 제주도가 감사를 받아야 할 내용일 수 있는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20일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주도 지방채가 약 14% 정도 된다. 지방채 비율을 15%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었는데 이 원칙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재정기조 ‘긴축’에도 예산 낭비 지적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현안 점검  
드론 구입 후 ‘무용’  
공용차량도 관리 부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매뉴얼 있어야”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소관 부서의 현안을 꼼꼼히 살폈다. 도정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 기관 지도·관리 감독의 소홀 등을 지적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긴축재정만큼 중요한 것이 투입된 예산만큼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 취득한 자산인 드론도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

지 않고 있다. 구입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드론도 있다”고 제기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공용차량 내구연한이 충분한데도 전기차 등을 지속 구입하고 있다”며 “구입해 놓고 청사 주차장에 세워서는 1,000km도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 많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읍)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봉 의원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지도 관리·감독 매뉴얼을 자료로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은 소홀히 하고 있거나 매뉴얼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감사인 추천이나 관리·감독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19일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발주후 예산 잔액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불용해 다음 회계연도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면 문제가 많아 보인다”면서 “행사 운영 직원 식사비

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낙찰 차액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으로 출동하고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원책을 연계하는 아동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경심 의원은 “언제 접수될지 모르는 신고를 기다리며 출동대기를 해야 하는 분들이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수당 문제 등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일도지구가 신제주에 비해 건축고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으며, 원도심 활성화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제주호국원의 안장대상자와 제주 충혼묘지의 안장대상자는 동일해야 한다”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전 매장에 시행해야”

## 환경도시위원회

“형평성 문제 해소 위해 전 매장에 적용시킬 것”주문

육상양식장 배출수 및 정수장 위생관리 등 문제 제기, 관리 방안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는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전면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2일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초기에는 형평성 논란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매장 전부에 적용시킬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현기중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시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운영 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을 놓고 “사실상 제도 폐지를 위한 후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도정이 제도 추진에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제도가 정착되고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18일 질의에 나선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하원 테크노 캠퍼스와 관련해 “도정이 민간우주산업 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한화시스템과 협력할 업체의 계획이 정확하지 않다. 도정이 이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창권 위원장은 육상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배출수의 기준을 정하게 된지 3년이 지났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기준을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준 없이 예전 방식 그대로 지내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엄청난 양의 물이 그대로 배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

동갑)은 19일 상대보전지역 용도 변경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환 의원은 “상대보전지역 용도변경이 ‘전결권자의 의견 표명’이라는 ‘실패’ 발생으로 허가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민들은 해당 지역에 식당이 들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처리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 결정이 특혜를 준 거라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한림읍 금악리 폐기물 업체 증설 사업 허가를 놓고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반발이 크다”

면서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시에서 직접 이 업체를 고발했는데도 허가를 내줬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인근 지하수 등이 전부 오염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지역 대부분 정수장의 위생 관리가 허술한 것을 놓고 “정수장 관리 소홀 원인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부족 때문”이라며 “수도법을 보면 정수장별로 자격증을 갖춘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가 있어야 하는데 정원의 절반 정도만 배치됐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행정 집행 실태 지적...합리적 대안 요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광산업 체계적 관리 필요 들불축제 연속성 문제 제기 아트플랫폼 사업 관련 지적도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소속 의원들의 송곳 질문이 잇따랐다.

지난 11일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지난해 제주 관광 조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많은 돈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GRDP) 중 관광업계가 30% 이상을 차지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도 관광업계 1인당 부가가치는 2650만원으로 전국 꼴찌”라며 “그 이유는 관광업계가 우후죽순 생겨나도록 하는 낮은 진입 장벽에 있다. 행정 개입을 통해 최소한의 진입 장벽을 높

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컨벤션부로 해외 출장과 관련해 “해외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행사에서 홍보관에 상주해야 할 직원들이 패키지여행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확인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인숙 의원은 이어 “책임자로서 컨트롤해야 하는데, 개인 시간으로 활용했던 것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17일 열린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들불 축제 개최 취소 결정과 관련해 “축제를 1년 쉬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그 이후를 장담할 수 있느냐”고 강병삼 시장에 따져 묻는 등 연속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승아 위원장은 읍·면·동 문화예술 축제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며 “축제 예산을 민간 보조금으로 진행하면서 가까스로 축제를 여는 경우가 있다”며 “민간보조 사업으로 진행하

게 되면 각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는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교부 조건을 확인하지 못해 가칭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관련 국비가 교부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사업 대상 시설과 부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소유권이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돼 있어 교부가 안된 것”이라며 “교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재밋점 건물의 소유권을 제주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상수 의원

(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흥동)은 “탐라문화제가 제주시 중심으로 치러지면서 서귀포 지역은 소외당하고 있다”며 “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내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대피 대책이 부족하다고 거론하며 “화재 등의 상황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어려움이 있다.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장애인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 “감귤 생산 원가는 ↑... 수매 단가는 그대로”

## 농수축경제위원회

가공용 수매단가 동결  
농가 권익 반영 필요해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  
국비 확보 노력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가 제주도정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마에 올랐다.

지난 11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감귤 생산 원가가 높아졌는데도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7년째 동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재정의 감소와 가공업체의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가격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감귤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단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감귤 가공업체는 맛있는 감귤주스를 판매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맛있는 감귤을 비싸게 사서 품질 좋은 가공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매 단가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6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치’와 관련해 “예산이 절반밖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는 기존 통계 관리 기관과의 협조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며 협의체 구성을 주문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승준 의원은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국비 예산 확보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며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국비확보 노력을 촉구했다.

17일에는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제주테크노파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테크노파크의 예산집행율이 지난 8월 말 기준 소관 국, 출연기관 중 꼴찌”라며 지적했다. 또한 “정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인원 비중이 높다. 조직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관리에 있어 문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계획과 관련해 부진한 전기차 보급률을 지적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2016년도에는 전국 전기차 보급대수 대비 제주 보급률이 50%이상을 차지했는데 현재는 8%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전체 자동차의 75%인 약 37만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인 게 뻔한데 그대로 추진한다면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 현안 ‘도마 위’...예산 낭비 논란도

## 교육위원회

서부중 부지에 유물 발견  
향후 대책 등 질의  
제주형 자율학교 등  
주요 사업 미흡 지적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는 서부중 신설 사업과 제주형 자율학교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용담2동)은 11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칭 서부중학교 부지에 탐라시대 초기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향후 대책을 물었다.

김황국 의원은 “유물이 발굴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물이 나오면 학교 준공은 어려울 것”이라며 “매입 당시 탐라역사권 문화재 지구 발굴 조사 지역 근처라는 점을 도교육청이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오승식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놓고 “올해도 8개 유형의 자율학교가 생겨나서 살펴본 결과,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다”며 “학교별로 특색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꼬집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교육청 오라청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이남근 의원은 “오라청사를 직접 확인한 결과 상주 직원은 10명 안팎”이라며 “연임 대료가 월 4000여만원 등 연간 5억원이 투입되는 오라청사에 대한 효율

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예산 투입 계획이 없다”며 늘어나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한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 용역이 1억원을 투입해 이뤄졌지만 부실하게 진행됐다”면서 “부실한 용역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이운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은 학교 전기 공사시 유독 2개 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투명성을 제고해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12일 김창식 위원장은 문해력 향상을 위한 나름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창식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소리내서 읽거나 받아쓰기 학습, 낱말 공부 등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대해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채용된 지휘자의 겸직을 문제 삼았다. 20일 김대진 의원은 “다른 오케스트라에서도 지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6월에 채용했지만,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집중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은 오등봉공원 사업에 따라 오등봉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것과 관련 “유치원까지 함께 신설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 제12대 전반기 의정 주요 안건 처리 요약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 ▲대표발의: 송창권 의원
- 공동발의: 양영식·강경문·현길호·이경심·이상봉·박두화·원화자·김기환·고의숙 의원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의 금지를 위해 △제한업소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등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양영식 의원
- 공동발의: 임정은·이상봉·한권·한동수·양홍식·강철남·송창권·양경호·박호형·강봉직·김기환·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놀이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 가입 등을 수행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고의숙 의원
- 공동발의: 오승식·정민구·이남근·현길호·박두화·강경문·강동우·원화자·이상봉·하성용·양홍식 의원



직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 괴롭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2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조치 절차 적극 홍보 등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 ▲대표발의: 강경문 의원
- 공동발의: 강상수·김기환·이남근·고의숙·김창식·원화자·하성용·정민구·이상봉·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행정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소속 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현길호 의원
- 공동발의: 이경심·강성의·박두화·송창권·이상봉·이승아·김경미·송영훈·강경문·원화자·고의숙·고태민 의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함. △관광·문화·예술·체육 등의 활동을 할 때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현장 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현장 해설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대표발의: 이경심 의원
- 공동발의: 정민구·현길호·양병우·고의숙·한권·하성용·이남근·김대진·김경미·양홍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 보육 교직원 인권 향상에 이바지.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지원 사업·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등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김기환 의원
- 공동발의: 강성의·양영식·송창권·박호형·강봉직·원화자·강하영·이상봉 의원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에 대한 의견 제시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포럼·토론회 참여 및 개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됨

##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대표발의: 원화자 의원
- 공동발의: 현지홍·현기중·강상수·양영식·양홍식·김승준·양경호·강경문 의원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이 규격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파손 및 훼손되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보도점자블록 설치표준안 마련 및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해야 함



# 부정청탁 금지란?

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특히 법에서 정한 14개 직무분야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부탁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익목적의 공개적인 의견 전달 등의 7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의 14가지 유형!

1. 불법 인허가 면허 등 처리
2.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 형벌부과의 감경 면제
3.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개입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선정, 탈락되도록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의 선정, 탈락에 개입
6.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7.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8. 보조금, 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입학, 수학,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 조작
11.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 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개입



## 부정청탁의 예외 7가지

1. 법령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신기한 제주어 ㉕

## 우 알

(명사) 위 아래

<예문>

어딜 강 혼디 어울려도, 우 알에 부땡 얼탑지게 술도 잘 먹곡, 그자 좋아그네 해삭해삭 웃이멍 이사름도 좋다 저사름도 좋다 누게라도 다 웃주와주는 <해삭이형!>

- 혼디 : 함께    · 부땡 : 붙어서    · 얼탑지게, 얼합지게, 얼랍지게, 얼합치게 : 탐내며 정신없이 서두르다    · 그자 좋아그네 : 그저 좋아서
- 해삭해삭, 해삭해삭, 캐삭캐삭, 해쌉해쌉 : 헤쾌게 웃는 모양. 단단하지 않아 풀리기 쉬운 모양    · 웃이멍 : 웃으면서    · 이 사름 : 이 사람
- 누게라도 : 누구라도    · 웃주다 : 높여 대접하다
- 해삭이 : 만족 한 표정으로 입을 헤벌리고 있는 모양

양전형 저 「제주어 용례 사전①」중에서

# 도의회 공식 유튜브

## 구독·좋아요

## 알람 설정

도의회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실효성 있는 지원을 주문하며’



강 동 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요즘 제주 교육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제주교육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김광수 교육감이 제시한 ‘제주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대책은 제주 교육 3주체 모두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교육가족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제주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과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은 교육 주체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본질적 대응도 없는 지원 방안을 내놓은 김광수 교육감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교육청이 학생 인권에 대한 원래적 의미 인식을 통해 교육 3주체가 상호존중의 배움을 스스로 얻어갈 수 있도록, 학교 내 인권문화적 환경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가며 얻은

결론은 단 하나였다. 교육활동 침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교육의 3주체 간에 서로의 역할을 찾아서 다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게 제주교육가족 모두의 희망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지난 제42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은 김광수 교육감의 종합지원 방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였고,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육가족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특단의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제주교육청은 각계각층에서 제안되었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방안”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지난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간 쟁점이었던 아동학대·악성민

원·피해교원지원·가해학생 조치·지원체제·보호자의무 등에서 교육활동체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민원대응팀이 순조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들의 협조와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 지원되는 녹음가능 전화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제주교육가족들이 겪는 특수성을 찾아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핀셋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하여 교육 3주체 모두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주교육은 교육 3주체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적 고립 청년’, 희망과 미래 기대하며

김 신 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당사자의 신체·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당사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문제로 커진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법적·정책적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정책 대상자

로 포섭하기 어렵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등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이 일부 있으나, 사회적 고립 청년에 초점 맞춘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제주도는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

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을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고립 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여러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고립 청년의 자립을 위해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또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이외에 다

양한 서비스도 지원하도록 한다.

도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 초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약하고 자신의 공간에서 나가길 꺼리는 고립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정책 발굴 및 접근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청년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내일이 실현되길 바란다.

#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 진 범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무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로, 제주시에서만 2022년 기준 2만3753건이 접수되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는 제도다.

주민신고제는 기존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근거한 5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대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신고기준 시간을 1분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는 해당 구간에 차량을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다음과 같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다.

이 가운데 소화전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과 직결된 곳으로, 일반 과태료보다 높은 8만원,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

문고’ 앱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촬영한 사진을 2매 이상 첨부하되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위반 차량 전체를 촬영해야 한다. 사진상으로 차량번호와 주정차 위반사실이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가까운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성숙한 주차문화가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 의회·사무처 직원 화합·친목 한마당



## 제주도의회, 지난달 23일 의원·직원 ‘한마음 체육행사’ 부대행사 수익 기부 ‘눈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지난달 23일 이호 운동장에서 ‘한마음 체육행사’를 통해 화합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의원과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마련된 것으로, 직원 가족들도 함께해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한마음 체육행사’는 식전 공연과 개회 선언 및 선수대표 선서,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APEC 성공개최 게임, 단체 고리 던지기, 4방 피구, 축구 게임 등 다양한 경기로 진행됐다. 본 경기가 끝난 후에는 도의회와 제

주도, 도교육청 3개 기관이 함께하는 경기를 갖는 등 스포츠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대행사로 직원들이 손수 제작한 수세미와 천연염색동아리에서 제작한 감귤 베갯잇을 판매,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한 직원들은 “직원들 간에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

서 “더 나아가 남은 2023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학 의장은 대회 개최사에서 “의원 및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즐길 수 있는 행사하게 돼 반갑다”면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 멋진 승부를 펼치고, 업무에 지친 이들에게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현길환 사무관 임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임 농수축경제전문위원으로 제주도 고용

센터 취업지원총괄팀장인 현길환 사무관이 임용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0일 의장 집무실에서 현길환 신임 농수축경제전문위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은 지난 1997년 공직에 입문해 서귀포시 성산읍장과 의회 사무처 공보팀장 및 민원팀장,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장 등을 역임했다.

김경학 의장은 “적극적으로 상임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서장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연찬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최민수 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을 초청해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조례제·개정안 입법유형, 심사 시 체크사항, 입안 사례 등을 설명하고, 질

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전문가 초청 연찬이 도의회에 처음 근무하는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의회 전 직원이 연찬을 통한 전문지식을 실무에 잘 활용해 도의회의 자치입법 능력이 한 차원 더 높아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해 법제 실무, 의안 검토 실무 등 총 19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 연찬을 실시한 바 있다.

## 4대 폭력예방 통합 교육 운영

### 의원·간부공무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9월 2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맞춤형 폭력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인 이미영 한국성인권교육센터장을 강사로 초빙해 ‘일상에 스며드는 폭력에 대해 질문하기’를 주제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확립 및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경학 의장은 “4대 폭력 예방의 중요성과 성평등한 인식을 제고, 건강한 직장과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과 간부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의 역할이 필요하다” 밝혔다.

또한 “모두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이해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쳐버린 성차별과 불균형적 요소들을 인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반부패 의식 함양 위한 청렴 교육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9월 2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의식 함양을 위한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국민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전문 강사를 초빙해 건강한 조직 문화 및 올바른 공직자상 재정립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일부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사항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평소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반부패 청렴 교육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 공직자들이 매사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